

## 위기가구 발굴부터 지원·사후관리까지 전 주기 대응 강화로 '복지안전매트' 구축한다.

-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 협의체」 1차 회의 개최 -

- 국민이 찾기 전에 먼저 찾아 지원, 위기 상황을 사전에 포착해 예방,  
현장에서 편리하게 신청하는 선제적 복지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23일(화) 오전 10시 복지·고용·금융·주거 등 분야별 위기가구 발굴·지원 정책의 관계부처 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대통령은 최근, 같은 어려움이라도 국민에게 서로 다른 무게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안전·돌봄·소득·주거 등 삶의 전 영역을 세심하게 보듬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위기가 드러난 이후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위기에 빠지기 전에 먼저 살피고 지원 하는 선제적 복지체계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간 복지사각지대 및 고독사 발생은 생계 위기, 정신건강 문제, 주거 불안 등은 복합적 위험 요인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부처별 개별 대응으로는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충분히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민생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취약계층의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위기가구 발굴·지원 체계를 범정부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처음 마련하였다.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는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12개 관계기관 국장급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기가구 발굴·지원 정책의 연계·조정, 협업 과제 발굴을 위해 정례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구성) 위원장(보건복지부 제1차관), 위원(교육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우정사업본부 국장급)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체 구성·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정책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 계층 등 금융 위기정보 연계 확대를 비롯해, 연락두절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사실조사 협업 강화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복지 위기가구의 발굴·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그늘진 곳 없는 복지안전매트 구축 방안」을 관계부처와 공유했다. 이번 대책은 기존의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에서 포착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국민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찾아 지원하는 ‘선제적 복지’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①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강화

먼저,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그동안 입수해온 위기정보의 품질을 개선하고, 금융 연체·채무, 의료비 과다 지출, 고독사·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을 포착할 수 있도록 정보 연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토대로 AI 예측모형을 고도화해 위기 가능성이 큰 가구를 선별하고,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는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민·관 협업 기반의 지역사회 발굴을 강화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 구성을 생활 밀접 업종 종사자 등으로 다양화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전기검침원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 종사자가 참여하는 복지위기 알림 앱\* 활용을 함께 확대해 현장에서 위기 징후를 신속히 포착할 예정이다.

\* 복지위기 알림 앱 회원 수 : (25년) 7만명 → (26년) 15만명 이상 확대

## ② 세심한 상담과 누락 없는 신청, 현장 중심으로 개선

위기가구로 발굴된 이후에는 가구 단위의 체계적인 조사와 세심한 상담을 통해 실제 필요한 지원이 누락 없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복지 위기가구, 위기 아동, 고독사 위험군 발굴조사를 가구 단위로 통합하여 현장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조사를 내실화하고, 고위험 가구는 우선 방문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상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대화와 공감 가능한 생성형 AI 상담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단순 질의응답을 넘어, 여러 욕구가 함께 나타나는 상황에 대해 공감형 상담과 맞춤형 서비스 안내가 가능하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다.

\* 정해진 질의·답변만 가능한 시나리오 기반 AI → 대화·공감형 기반 생성형 AI

신청 단계에서는 모바일 기반 현장 신청을 확대해,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현장에서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전국으로 확대\*하고, 사회보장급여 신청 서식을 간소화해 국민의 부담을 줄인다.

\* 모바일 행복이음 활용 지자체 : 57개 시군구(25) → 전국 확대(26~)

### ③ 신속하고 촘촘한 지원, 사후관리까지 강화

지원 단계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 지원을 중심으로 보호를 강화한다.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완화해 수급 대상을 확대한다. 긴급복지 지원의 경우 생계지원금 인상 등 지원을 강화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빈곤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 긴급복지 생계지원 : <sup>1인가구</sup>73만원('25) → 78만원('26), <sup>4인가구</sup>187만원('25) → 199만원('26)

아울러 고독사 예방 사업을 사회적 고립까지 확대하고, 고독사 위험군 발굴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해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예방 사업을 추진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과의 연계를 강화해 정서·심리적 위기도 함께 지원한다.

\* 알코올 질환·정신질환 등 질병 관련, 전기사용량 등 사회적 고립 관련 위기정보 27종 활용

더 나아가 반복적으로 발굴되는 위기가구와 수급 탈락·중지 가구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위기 이력과 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복지멤버십을 활용해 수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는 선제적으로 안내한다.

### ④ 복지멤버십 및 AI 활용으로 국민 체감도 제고

정부는 복지멤버십 안내 사업을 확대하고\*, SNS 알림톡 등 안내 수단을 다양화하여 국민이 복지서비스를 편리하게 안내 받을 수 있도록 복지멤버십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해 신청현황 안내, 수급 결정 지원, 맞춤형 복지 서비스 추천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행정 혁신을 추진한다.

\* (23년) 80종 → (24년) 127종 → (25년) 163종 → (26년) 200종 이상 확대

이스라엘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겨울철은 생계, 주거, 돌봄, 사회적 고립 등 여러 위험 요인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시기인 만큼, 정부가 보다 먼저 살피고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할 때”라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 누구도 추위와 위기 속에서 홀로 남지 않도록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안전 매트를 반드시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붙임> 1. 「그늘진 곳 없는 복지안전매트 구축 방안」 추진 방향  
 2. 「그늘진 곳 없는 복지안전매트 구축 방안」 주요 과제  
 3.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 1차 회의 개요  
 4.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 구성

담당부서 (총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책임자	과 장	우경미 (044-202-3120)
		담당자	서기관	한두희 (044-202-3123)
담당부서 (복지멤버십)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책임자	과 장	윤병철 (044-202-3140)
		담당자	사무관	김재희 (044-202-3144)
담당부서 (AI 활용 복지사각지대 발굴)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	책임자	과 장	김기철 (044-202-3160)
		담당자	사무관	김진우 (044-202-3172)
담당부서 (AI 복지, 모바일 행복이음)	보건복지부 복지정보운영과	책임자	과 장	홍화영 (044-202-3170)
		담당자	사무관	권순형 (044-202-3163)
		담당자	사무관	노치형 (044-202-3162)
담당부서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책임자	과 장	박민정 (044-202-3050)
		담당자	사무관	류지은 (044-202-3061)
		담당자	사무관	이동훈 (044-202-3058)

- ❖ 국민이 찾기 전에 **먼저 찾아 지원**하는 **자동 복지**
- ❖ 체계적 조사로 위기 상황을 **선제적으로 포착**하는 **예방적 복지**
- ❖ 현장에서 누락 없이 즉시 신청하는 **간편한 복지**

**① 자동 지급 기반 마련**

- **(현재)** 복지 서비스 정보 부족으로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놓치거나, 수급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 발생
- ⇒ **(앞으로)** 복지멤버십을 활용, 개인별 소득·재산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 안내 ⇒ 자동 안내·지급 기반

**② 가구 단위 체계적 위기가구 발굴**

- **(현재)** 복지 위기가구, 위기 아동, 고독사 위험군 발굴조사의 분산 운영에 따른 현장의 부담 가중, 중복 조사에 따른 비효율 존재
- ⇒ **(앞으로)** 가구 단위 체계적 조사, AI 예측모형 고도화, 고위험 가구 우선 방문 조사 ⇒ 위기가구의 선제적 포착 및 사전 예방

**③ 현장에서 즉시 신청하는 간편한 복지**

- **(현재)**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서류 제출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긴급한 위기 상황에 신속한 지원이 어려움
- ⇒ **(앞으로)** 언제 어디서든 활용 가능한 생성형 AI 상담, 모바일 기반 현장 신청 ⇒ 대기시간 단축, 서비스 누락 없는 간편한 복지

**① [발굴]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 (정확도 제고) 위기정보 입수기준 정교화·상시 관리, 위기 상황의 선제적 포착을 위한 금융, 의료 등 연계 정보 확대, AI 예측모형 고도화
- (민관협업 발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 인적 안전망, 복지위기 알림 앱\*을 활용한 현장 위기가구 발굴 강화
  - \* 생계·돌봄·사회적 고립 등 본인과 이웃의 복지위기 상황을 모바일 앱을 통해 도움 요청
- (거버넌스) 분야별 위기가구\* 발굴·지원, 정보관리, 자원 연계 활성화 등 범정부 협업을 위한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 신설
  - \* 금융 위기정보 연계(금융위), 고용 위기가구 발굴·연계(고용부), 북한이탈주민 발굴(통일부) 등

**② [조사·상담·신청] 세심한 상담, 누락 없는 신청**

- (발굴조사 내실화) 현장의 제한적 인력 여건을 고려한 체계적 가구 단위 조사\*,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자체 자율 발굴 강화, 고위험군 우선 방문
  - \* 복지위기가구, 위기아동, 고독사 위험군 등 체계적 가구 단위 발굴조사
- (AI 상담 고도화) 복합적 욕구 파악이 가능한 생성형 AI\* 상담, AI 상담 챗봇을 개발, 단계적 적용을 통한 상담 품질 및 활용률 제고
  - \* (현재) 정해진 질의·답변만 가능한 시나리오 기반 AI → (개선) 대화·공감형 생성형 기반 AI
- (신청 접근성 제고) 모바일을 활용해 현장에서 즉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발, 모바일 사용 제약 환경 개선, 복지급여 신청 서식 개정

**③ [서비스 지원] 신속하고 촘촘한 지원**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생계급여·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을 통한 수급 대상 확대 및 비수급 빈곤 사각지대 해소

- (긴급복지 확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빈곤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긴급복지 지원 강화\*

\* (생계지원) 1인가구 73만원('25) → 78만원('26), 4인가구 187만원('25) → 199만원('26)

- (사회적 고립 예방) 사회적 고립으로 대상 확대, 고독사 위험군 발굴 시스템 구축\*, 청년 정신건강, 중장년 사회적 관계망 형성, 노인 건강관리, 돌봄서비스 등 맞춤형 정책 개발·추진

\* 알코올 질환·정신질환 등 질병 관련, 전기사용량 등 사회적 고립 관련 위기정보 27종 활용

#### ④ [사후 관리] 복지위기 사전 예방

- (반복 발굴 가구 상담 강화) 발굴 이력, 다빈도 위기 변수 분석을 통한 위기 상황 해소 지원\*, 지속적 관리를 위한 전산 기능 마련

\* 위험 수준에 따른 방문 조사, 사례관리 연계 등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등

- (수급 탈락·중지 가구 사후관리) 기초생활보장 중지 가구에 대해 복지멤버십을 활용한 수급 가능 여부 안내, 직권 신청을 활용 강화
- (급여 미신청 가구 모니터링)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 강화, 지자체 복지공무원 대상 고위험군 관리 및 급여 신청 안내 강화 교육

#### ⑤ [AI 복지]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행정

- (복지멤버십 활성화) 복지멤버십 가입자 및 안내 사업 확대, 소득 재산정보를 활용한 수급 가능 급여 안내 등 효과성 제고 추진
- (국민 AI 안내도우미) 신청현황, 조사·이의신청 결과 등 관련 정보를 신청자에게 문서·음성 등을 통해 제공하는 AI 안내 도우미 개발
- (공무원 복지행정 AI) 조사·결정 등 급여 관리 전반의 반복적 업무의 자동화를 통해 효율적 행정을 지원하는 AI Agent 개발
- (국민 맞춤형 서비스 추천) 복지제도, 상담 결과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추천, 개인별 수급 이력 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 개발

**1. 회의 개요**

- (일시) '25.12.23일(화), 10:00~11:30
- (장소) 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중회의실
- (참석) 보건복지부 제1차관(주제), 12개 중앙부처 소속 국장급 위원\*
  - \*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가보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통일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우정사업본부

**2. 회의 안건**

- ①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 구성·운영 계획(보건복지부)
- ② 그늘진 곳 없는 복지안전매트 구축 방안(보건복지부)
- ③ 부처별 위기가구 발굴·지원 정책 추진 현황 및 협업 필요 사항(위원)

**3. 세부 일정**

시 간	세 부 내 용	비 고
10:00~10:05('5)	▪ 개회 및 인사 말씀	위원장
10:05~10:10('5)	▪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 구성·운영 계획	간사
10:10~10:20('10)	▪ 그늘진 곳 없는 복지안전매트 구축 방안	간사
10:20~11:25('65)	▪ 부처별 위기가구 발굴·지원 정책 추진현황 및 협업 필요사항	위원
11:25~11:30('5)	▪ 폐회 및 마무리 말씀	위원장

※ 간사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장

**붙임 4****「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 구성**

구분	부처	직위	관련 업무
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	• 복지사각지대 해소 총괄
위원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국장	• 저소득층 학생 발굴·지원
위원	통일부	사회문화협력국장	• 북한 이탈 주민 발굴·지원
위원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 위기가구 발굴(주민등록조사)
위원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장	• 저소득 국가보훈 대상자 발굴·지원
위원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 복지 위기가구 발굴·지원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위원	기후에너지 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	•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원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 고용-복지-정신건강 연계 • 고용 위기가구 발굴 및 취업 지원
위원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관	• 위기 가족 발굴·지원
위원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 주거 취약 계층 지원 • 주거 급여 지원
위원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 금융 위기가구 발굴, 복지 연계
위원	경찰청	형사국장	• 연락두절 위기가구 발굴
위원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장	• 복지 우편, 안부살핌 소포 등